사립 공공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민간이 만드는 공공도서관은 정책혁신이다

경제학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공공재로 정의한다. 누구든 사용 가능하고, 같이 사용해도 서로 불편함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사용 인원이 제한되기도 해 공공재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재의 특성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재화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경제학 원론에서는 공공재를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실패'를 우려해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공도서관 = 정부 제공' 공식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면 도서관은 문화 재화다.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보다 고급스러운 문화를 찾는다. 이 고급문화는 다양성이 생명이다. 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형태를 반영한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이런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공공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규제와 감독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혁신정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집기들은 혁신과 구태 중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의 규제와 감독 절차를 거치고 나면, 혁신적 아이디어는 남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획일

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걸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획일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민간은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는, 다시 말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면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존재할 수 없는 걸까? 있다. 바로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재다. 공공경제학에서는 이를 'Privately provided public goods'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을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면,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 되고, 도서관법으로 구분하자면 '사립 공공도서관'이 된다. 정부에선 영어로 'Non-governmental public library'라 표현하지만 틀렸다. 올바른 영어표현은 'Privately provided public library'이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누구든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모두 함께 사용해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공공도서관이다. 운영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일 뿐이다. 또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으니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를 놓더라도 경영가의 철학을 불어넣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니 좋다. 지방정부 또한 돈 하나 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모두가 행복한 최고의 공공서비스다. 그러나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자선가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특히 기부행위 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더욱 힘들다.

지속적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절감적이다.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대신해주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남의 첫 사립 공공도서관, 마하어린이도서관

상대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비용 문제가 덜한 편이긴 하다. 그러나 기부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대학 등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서관에 대한 민간 기부는 활발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절감적이다.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대신해주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지역 주민이다. 받은 편익에 대해 어느 정도 본인의 경제여건에 맞게 부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선 기부자도 멀리 있는 학교나 국가단체에 기부하려 하지 말자. 본인이 사는 지역의 사립 공공도서관에 기부하는 게 기부를 통한 자부심이 더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정부의 공공도서관은 1134개이지만, 그 중 사립 공공도서관은 24개뿐이다. 이제 민간의 공공도서관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혁신과 사회분위기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